

이슈브리프 18-24

2017년 북한 경제성장을 급감의 원인과 전망

ISSUE
BRIEF

2018

0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급감의 원인과 전망

임수호 (북한연구실)

20년 만에 최저의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은 7월 21일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였다.¹⁾ 결과는 전년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3.5% 감소로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1995~1997)이 종료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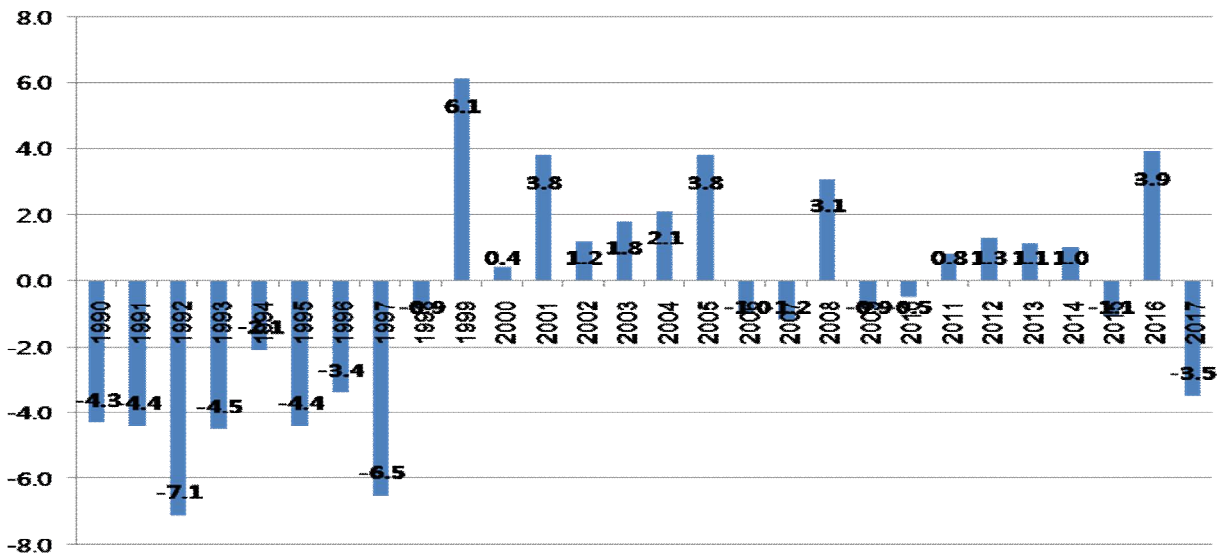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1997년까지 매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1998년부터 성장률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998~2016년 기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3%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3.9%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마이너스 3.5% 성장률은 2016년 3.9%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급감에 해당한다. 과거 전년도 상대적 고성장이 다음 년도 상대적 저성장으로 이어진 경우들인 1999년→2000년(6.1%→0.4%), 2001년→2002년(3.8%→1.2%), 2005→2006년(3.8%→-1%), 2008→2009년(3.1%→-0.9%) 등과 비교하여도 2016→2017년(3.9%→-3.5%)의 기록은 특이한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한국은행,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18.7.21.)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1990~2017)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대북제재가 마이너스 성장의 핵심 요인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원인은 대북제재라고 판단된다.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0.5% 성장)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광업(-11%)과 제조업(-6.9%)이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문들은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받은 부문들이다.

광업과 제조업 부문 국내총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17년 2월 시작된 광물 수출제재와 9월 시작된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출제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무연탄 수출액은 2017년 전년대비 65.9% 감소하였다. 2017년 2월부터 중국의 대북제재(안보리결의안 2321호 및 2371호) 동참에 따라 3~7월과 10~12월에는 수출실적이 전무하였다.

두 번째 큰 수출품이었던 철광석은 1~4월까지의 전년 대비 수출액이 급증하다 6월부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되었으며, 10월부터는 수출실적이 전무하였다. 안보리결의안 2371호(2017.8)에서 북한산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여파로 해석된다.

직물 및 의류의 경우 수출액이 전년대비 22.3% 감소하였다.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수입을 금지시킨 안보리결의안 2375호는 9월에 채택되었고, 중국이 제재 이행에 동참한 것은 12월부터이지만, 실제로는 5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매월 감소하였다. 이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중국이 7월부터 독자제재를 실시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한편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12월에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5.9%나 감소하였다.

광물 및 의류 수출제재가 북한의 관련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유는 관련 산업들이 수출과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연탄의 경우 내수탄은 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수출탄의 경우 판로가 막히면서 생산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광석 역시 내수용 채굴은 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코크스 수입을 위해 수출해온 수출용 철광석은 판로가 막히면서 채굴량이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물 및 의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부용 생산은 제재의 영향을 적게 받았겠지만, 중국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수출용 임가공 생산은 직격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문제는 2018년에도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의 수출은 2018년도에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8년 1~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1%(1월), 32.4%(2월), 56.4%(3월), 43%(4월), 40.3%(5월) 감소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2397호가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이행단계로 진입한다는 사실이다. 2397호는 기존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의류 수입 금지에 더해 일부 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도 금지시켰다. 수출액 급감은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능력(외화) 감소로 이어져 생산 감소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편, 안보리결의안 2397호는 기존의 수출제재에 더해 수입제재도 포함하고 있다. 2397호는 대북 정제유 수출을 기존의 1/4 수준인 50만 배럴로 동결했으며, 산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초금속(base metal)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기계나 부품, 차량은 물론이고 쇠로 만든 숟가락 하나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품목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공장가동 및 운송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올해 2016년 5월 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과 올해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추세를 살펴봐도 분명히 드러난다.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7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8월부터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매월 감소폭이 증가해왔다. 1~7월의 경우 무연탄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 여타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판단 아래 내부 외화보유고를 활용하여 기존 수입계획을 밀어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8월부터 무연탄만이 아니라 철 및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도 제재대상에 오르면서 외화보유고 고갈이 예상되자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국제수지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올해 4월 열린 최고

인민회의에서는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2차년도 집행실적을 평가하면서 북한 당국은 단 한 번도 ‘계획 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 3차년도 집행실적은 더욱 참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회복의 출구전략으로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 추진

과거 북한은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추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곤 했다. 예컨대 국방비 증액으로 2차 5개년 계획(1967~1971) 달성이 실패하자 서방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소련이 추진하던 데탕트 정책에 적극 편승하였다. 그 결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평양축전과 순천 비날론 기업소 건설 등으로 외화를 대규모로 낭비한데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무역마저 급감하자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은 좌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차관을 갚지 못하여 서방 채권단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가로 지정된 상태였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경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남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경제적 배경이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대남 및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도 대북제재로 인해 5개년 전략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올해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이른바 ‘전략노선 전환’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현재의 전향적인 태도를 지속할지의 여부는 다른 경제적 대안의 유무와 밀접히 관련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관련국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